식품 안전 정보

1. 위생 점검

1) 구리시, 학교급식소 식중독사고 예방 '선제적 위생 점검'

(2017-3-1, 아시아일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학교 개학 철을 맞이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함. 이번 점검은 관내 학교 30개소(초등학교 15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구리시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합동으로 2개반 8명이 개학 시기에 맞춰 나설 계획임.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보관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조리장 방충 · 방서 시설이며, 점검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등 중요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방침임. 방희준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위생 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소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위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함.

2) 신속간편 농식품 위생점검 "대장균(군) 검출기" 개발

(2017-2-26, 식약일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샐러드바,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에서 대장균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내는 검출기가 나왔음.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현장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균군 · 대장균 간편 검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일반적으로 농식품 생산 및 가공현장에서는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검사하고 있음.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있는 정상 균총으로 비병원성(90%)과 병원성(10%)으로 구분하며 살균이나 가열공정이 없으나 위생관리가 필요한 신선식품의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됨. 그러나 기존의 표준검사법은 농식품, 작업도구에서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분리하고, 확인하기까지 3일~4일 정도가 걸리고 배양기 · 멸균기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이번에 개발한 검출기술은 시료에 발색시약을 넣고 검출기에서 12시간~18시간 배양하면 색깔변화로 대장균군과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음. 시료에 대장균군이 있는 경우 노란색으로 보이며 대장균이 있는 경우 365nm 자외선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과 동시에 형광을 띄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개발한 휴대용 검출기는 가로 35cm, 세로 20cm 정도로 크지 않으면서 가격 또한 기존 장비 가격보다 6배~7배 이상 낮아 현장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음. 개발한 기술을 새싹채소 재배농가, 식품가공업체,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 대량 급식소에 적용한 결과, "저렴하고, 손쉽게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빨리 구매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말해 앞으로 현장에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대장균(군) 검출기를 앞으로 산업체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며,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전국 GAP시설, 학교급식소, 군대, 외식업체 등에 보급할 예정임.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김세리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대장균 검출기를 보급하면 농산물 생산 · 가공 현장, 대량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빠르고 쉽게 확인해 국민 식생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함.

3) 서울시, 설 앞두고 역 · 터미널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9개소 적발

(2017-1-25, 매일경제)

서울시는 지난 19일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폭하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175개소를 선제적으로 위생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힘. 이번 위생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자치구공무원 33명 등 총 83명이 24개반으로 나눠 진행됐음.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3건 ▲위생모 미착용 3건 ▲폐기물 용기 관리 부적정 1건 등 총 9건임.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시설개수명령(1), 과태료 부과(8)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음. 또 영업주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리장 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추진해 기준이 초과된 79건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위생지도를 실시했음. 서울시는 이번 위생점검 전체 위반율이 지난해 설명절 대비 음식점 위생검사 결과와 비교해 1.2%p 감소했고, 특히 '건강진단미필 사항'(8→3건)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음.

2. 식품첨가물

1) '화학첨가물 범벅' 어린이용 건강식품 원천 차단한다

(2017-3-7, 연합뉴스)

어린이용 비타민과 홍삼제품 등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의 사용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됨.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발달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지 않은 합성착향료와 보존제 등 합성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보존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했음.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는 화학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음. 감사원은 식약처를 상대로 작년 9월 21일~10월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 감사를 벌였음.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에서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음. 나머지 9개 제품에는 적게는 1종에서 많게는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들어 있었음. 식약처는 어린이용 일반식품과는 달리 비타민과 홍삼, 유산균 등을 원료로 사용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화학첨가물에 대한 별도의 사용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식약처는 이들 어린이용 표방 건강기능식품에 쓰인 화학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것이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그렇지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제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2) 흔한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이 내장 세포 손상

(2017-2-21, 연합뉴스)

흔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티타늄(TiO2)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에 이어 내장 세포 구조도 손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빙엄턴대학 연구팀은 TiO2에 의한 손상으로 유해 세균이 소화기관에 침투하기 더 쉬워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소화기관 영양분 흡수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고 학계에 보고했음. 21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작은창자 내피세포 배양 모델을

만든 뒤 식품 1회 섭취 분량에 해당하는 TiO2 나노분자들에 4시간 동안 노출시켜 단기간 영향을 살펴봤음. 또 장기간 반복 섭취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 끼니 섭취 분량에 5일 동안 노출시켰음. 그 결과 장기간 반복 노출된 경우엔 나노 크기의 미세 TiO2가 내장 세포에 침투하며 영양분 흡수를 돕는 기능을 하는 미세융모가 손상됐음. 이로 인해 내장기관들이 약해지고 아연, 철분, 지방산 등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졌으며 음식 분해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음. 연구팀의 그레첸 말러 교수는 "TiO2는 흔한 식품첨가물이어서 장기간에 걸쳐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서 "이 물질의 나노분자 섭취를 줄이려면 사탕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나노임팩트'에 실렸음. ◇이산화티타늄 어디에 쓰이나 = 유럽 식품첨가물 번호 E171로도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은 페인트 · 종이 · 플라스틱의 표백색소, 치약의 마모제, 자외선차단제 같은 화장품 등에 쓰임. 또 사탕과 젤리, 껌, 탈지유, 커피크림, 초콜릿, 도넛 등 각종 가공식품에도 질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등의 용도로도 첨가됨. 기존에는 TiO2에 접촉돼도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왔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산화티타늄 가루의 경우 흡입 시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군 발암물질B로 분류하고 있음. 반면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에도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등록돼 있고, 유럽연합(EU)에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태임. 보건당국과 다수 식품 및 안전 전문가들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양은 미량이므로 걱정할 것 없고 아직은 이산화티타늄이 유해하다는 확증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2016년 스위스 취리히대 연구진이 TiO2 나노입자가 장 염증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구화가 진행되는 많은 나라에서 염증성 장 질환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가 TiO2 등의 미세입자일 수 있다고 밝혔음. 또 지난달엔 프랑스 연구팀이 TiO2를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한 동물의 40%에서 대장암 초기의 비(非)악성종양 출현이 나타났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내놓자 프랑스 정부는 안전성 재검토를 지시했음.

3) 미허용 식품첨가물 사용 수입 과실주 회수 (2017-2-15,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솔비앤비㈜(서울 송파구 소재)가 스페인에서 수입 · 판매한 과실주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규산알루미늄칼륨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음. 식약처는 "규산알루미늄칼륨은 식품 중 착색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신청 등이 없어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회수 대상은 제조년월일이 2016년 8월 30일, 2016년 11월 14일인 '마밤 글래시어'와 '마밤 텐테이션'임.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음.

4)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1위] 사카린, 설탕 대체 식품첨가물 (2017-2-15, 한국경제매거진)

㈜제이엠씨의 설탕 대체 식품첨가물 사카린이 14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소비자가 뽑은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식품(식품첨가물) 부문 1위를 수상했음. 사카린은 제이엠씨에서 1954년 국내 최초로 생산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음.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2016 세계일류상품' 선정사업에서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음. 또한 사카린은 최근 국내 · 외에서 항암(암세포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임. 칼로리와 혈당수치가 0이므로 당뇨와 비만 환자를 비롯한 현대인들에게 설탕 대용품으로 적절함. 제이엠씨 정원식 대표는 "이번 수상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고 세계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꾸준히 달려온 노력의 결과인 것 같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 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한편 한경비즈니스는 '2017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선정해 대한민국 유수 브랜드의 부문별 제품과 서비스 만족도 및 우수성을 검증했음. 이번 시상식은 약 60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소비자 조사, 선호도 조사, 심사위원상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총 62개 브랜드를 2차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음. 이 지수는 각 산업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따른 실직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소비자 만족도 지수로, 소비자가 각 분야별 상품 및 서비스 만족도를 직접 뽑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인증 받게 됨. 심사위원 및 20대 이상 소비자들의 평가를 통해 브랜드 선발, 선호도 리서치, 공적서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쳤음.

3. 원산지표시

1) 용인시 초중고 집단급식소 180곳 원산지표시 점검 (2017-3-6, 아시아경제)

경기도 용인시가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을 실시함. 이번 점검은 올해 신규로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된 항목에 대한 표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됨. 앞서 정부는 올해 원산지표시 품목을 기존 소 · 돼지 · 닭 · 오리 등 16개 품목에서 콩 · 오징어 · 꽃게 · 참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한 20개로 확대했음.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를 가로 29cm×세로 42cm(A3)이상,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제작해 비치해야 함.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메뉴판과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원산지가 표기된 주간 · 월간 메뉴표도 공개해야 함.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조치함. 시 관계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올해 달라진 원산지 표시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음.

2)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수위 높힌다 (2017-3-6, 브레이크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6일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음. 먼저 오는 6월 3일부터는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시행되며, 5월 30일부터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적발되거나 미표시로 2회 이상적발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경북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AI,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급이불안정한 배추김치,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품목 위주의위반이 줄어들지않고 있으며, 지난 해 같은 시기보다 30건이늘어난 186개 업소가 원산지 위반으로 대거 적발되었다고 함. 위반 위반유형을 보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혼동우려표시 또는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106개소로60%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80개소로 40%를 차지하였음. 경북농관원은 "원산지 지도 ·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원산지표시가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3) 제주 관광객 전문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수두룩 (2017-1-26, 연합뉴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제주도 내 관광객 전문식당 등 식품업체들이 설맞이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음. 제주도 자치경찰단

은 1월 11일부터 보름 동안 5개반 11명을 투입해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관광객 전문식당, 골프장 내 식당, 일반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이번에 적발한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행위가 8건, 오징어 · 갈치 ·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 미표시 5건,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표시 판매한 행위 1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행위 1건이 적발됐음. 골프장 · 호텔 내 음식점 7개소, 관광객 전문식당 5개소, 일반음식점 2개소, 마트 1개소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음.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림.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짐.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2담당은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 유형별, 업체별 테마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음.

4)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2017-1-12, 정책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6만 2000개소를 조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를 적발, 2015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개소로 전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했음. 이러한 원인은 농관원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 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율이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음. 품목별 위반을 보면 돼지고기 27.2%로 가장 높았고 배추김치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순이었고,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52.5%, 식육점 12.4%, 가공업체 10.0%, 슈퍼 3.6%, 노점상 3.2% 순 이었음.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음.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 · 호주산 · 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음.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 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4월) · 농협생산자 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했고, 소비자단체(4월) · 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했음.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 등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424만여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음.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또한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함.

4. 수입식품

1) 수입 식품서 기준치 초과 농약 · 동물의약품 검출 (2017-2-14, 이데일리)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부추와 동물의약품이 검출된 닭고기 등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음. 식약처는 킹스패밀리(서

울 서대문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에서 농약인 이프로디온이 기준(0.1㎎/㎏이하) 초과(2.2㎎/㎏)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음.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2월 8일인 제품임. 식약처에 따르면 2월 8일에 해당 업체가 수입한 신선부추는 모두 1200㎏임. 또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검출되서는 안 되는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세미카바자이드(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이 검출됐음. 이 약은 동물용 항균제 성분으로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음.

2) 국민건강 위협하는 수입식품 통관 보류 (2017-1-9, 디지털타임스)

오는 11월부터 국민건강에 위협적인 수입식품은 검사 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억류제도'와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보류제도'가 각각 시행됨.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 · 생산 단계부터 유통 · 소비 단계까지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강화됨. 진료비도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추가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음. 식약처는 먼저 고의 ·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 문제영업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유통기한 위 · 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 · 신고 취소 조치를 함. 또 한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영업장소 1년, 영업자 2년으로 늘리고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전에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를 명령할 계획임.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통관을 차단하도록 무검사억류제도와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함. 허위신고, 유해물질 함유 식품 등 이력이 있는 문제 영업자가 수입한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검사명령도 확대함. 또수입통관 검사체계를 24시간 연중 구축해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 · 냉장 어패류에 대한 검사도 강화함. 또 국제표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을 구축해 의료기기 출고시 제조 · 수입업자가 등록 · 부착한 고유식별코드를 기준으로 허가부터 생산, 유통, 사용단계까지 제품 전주기 정보를 수집 · 관리한다는 계획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 · 생산부터 유통 · 소비 등 전 과정을 늘 감시함. 음식점 · 급식 위생수준과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도 보완함.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 · 공개함. 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 · 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207개소에서 212개소로 늘림.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기존 사망, 장애 · 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함. 식품 정보, 의료제품 안전정보 제공 범위도 넓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모든 원재료로 확대함. 또 의약품 · 의약외품에 쓰인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할 방침임. 우수 식 · 의료품 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함. 식약처는 기본안전수칙에 대한 자율준수 결과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할 기관에 보고하는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를 추진함. 특히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전문단체와 범부처 국가의약품 통합관리체계를 만들어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고 생명에 위협적인 질병치료제가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임. 이 밖에도 유전자교정 기술, 의료기기 분야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재활로봇 등이 적용된 의료

제품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허가심사를 추진함. 또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진행할 방침임. 미국, EU 등 9개국이 참여해 의료기기 규제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가입과 국제화장품규제조화회의체(ICCR) 정회원 가입도 추진함.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함.

3) 관세청, 설 명절 제수용품 등 부정 수입식품 특별단속 (2017-1-9, 뉴스1)

관세청은 설 및 대보름을 맞아 1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40일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함. 이번 단속은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임.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산 · 축산물 14개 품목' 및 불법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과 선물용품인 '주류, 가공식료 2개 품목' 등 모두 25개임.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음. 집중단속 범죄 유형은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의 물품 속에 은닉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시 별도로 표시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는 행위 및 수입물품을 포대갈이 · 혼합 등의 방법으로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음.

4) 국내 수입된 미국산 자몽서 잔류농약 초과검출 (2017-2-28, 헤럴드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입된 미국산 자몽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음. 해당 제품은 식품 수입업체 아메코프룻마인이 수입한 것으로, 분량은 2만160kg임. 수입 일자는 1월 9일임. 이 제품에서는 농약인 포스멧이 잔류 기준의 2배인 0.10mg/kg 검출됐음.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 과정에서 수입원이 '엘에스네트웍스'로, 판매원이 '푸룻뱅크'로 잘못 표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음. 식약처는 수입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조사하는 한편, 수입업체 관할인 서울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음.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음.

5. 식중독사고

1) 구미서 초등학교 · 부설유치원 어린이 38명 식중독 증세 (2017-3-14, 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초등학교 및 부설 유치원 어린이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방역조사에 나섰음. 14일 구미보건소 등에 따르면 A 초교와 부설 유치원 어린이 38명이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설사, 구토, 복통 등 증세를 보였음. 이들 중 4명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음. 지난 10일 오후 이 같은 증세를 보여 같은 날 학교급식 때 노로바이러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했음. 당시 학교급식은 배추김치, 꽃게 된장, 오이 무침 등이라고 구미시 보건소는 밝혔음. 구미보건소는 구토 · 설사 증세를 보인 어린이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음. 그 결과는 15일 이후 나올 예정임. 학교 측은 13일부터 초교생(433명)과 유치원생 등 모두 520여명에게 학교급식을 중단했음.

2) 충남도 식중독 사고 증가 추세 (2017-3-15, 충남일보)

충남도내 식중독 사고가 증가 추세임. 도에 따르면 도내

식중독은 지난 2014년 14건에 21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015년에는 22건 367명, 지난해에는 32건에 288명을 기록했음.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시설별로는 음식점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급식소(8건)와 학교 외 집단급식(4건)이 뒤를 이었음. 특히 지난해에는 봄 행락철 기간 해안가 횟집에서 총 17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1회 급식 인원이 많은 학교 급식소에서 환자 수(3건 68명)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음. 이에 따라 도는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음. 올해 목표를 지난해보다 28% 줄어든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설정하고 위생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함. 도는 3월부터 5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식중독 발생 업소 및 횟집 등 위생 취약 음식점 859개소에 대한 전수 위생 점검을 실시함. 또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봄 행락철 고속도로 휴게소, 국공립 공원, 유원지내 식품위생업소 145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5월 '청소년의 달'을 대비해 4월 한 달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특히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위생 취약업소와 학교 급식소, 군부대,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컨설팅과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 서비스 시스템을 상시 가동함. 이 기간 동안 도내 위생취약업소 130곳에 대해서는 민간위생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함. 이와 함께 학교 급식소, 군부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중독 예측지수 SMS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임. 도 관계자는 "올해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강화 및 예방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주와 급식 관계자 등이 스스로 조리 및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자율적인 개선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음.

3) 회식한 안동시청 공무원 17명 식중독 증세 (2017-2-23, 연합뉴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17명이 회식을 한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음.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행사를 마치고 안동시내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한 공무원 17명이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음. 이들 가운데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심한 사람은 없음. 회식에는 69명이 참석했으나 나머지 사람은 특별한 증세가 없었음. 안동보건소는 회식을 한 식당, 식재료를 산 매장 등에서 관련 집기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음.

4) 서천 횟집에서 음식물 섭취한 주민 식중독 증세 역학조사 (2017-2-22, 뉴스스토리)

최근 서천지역 A횟집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주민 7명이 설사 및 복통을 일으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음. 22일 서천군보건소는 지난 17일 경 음식물을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식중독 의심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음.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장항읍에 위치한 A횟집에서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음. 이날 저녁식사 이후 1명이 복통과 설사증상을 보인 후 다음날 새벽 6명이 동일증상을 보여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음. 이에 서천군보건소는 A횟집을 찾아 식재료 및 조리기구 환경검체와 함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식중독 의심환자 7명에 대해서는 인체검사(대변 · 직장면봉)를 실시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모두 분석을 의뢰한 상태임. 검사 대상물에 대한 식중독균 판명여부는 내달 초 확인될 예정임. 서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일단 식중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위생 팀과 연계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우선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으로 지역 병 · 의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또 다른 의심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한편, 이번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횟집 및 각종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점검이 요구되고 있음. 내달 18일부터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개최되는데다 봄철 서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횟집 등을 즐겨 찾을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등의 질병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행정, 보건당국의 지도점검이 필요하

다는 지적임.

6.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 '인증마케팅' 강화

(2017-3-14, 파이낸셜뉴스)

식품업계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최근 일부 제품에서 불량원료 사용 등이 적발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업체가 스스로 품질인증 절차 등을 진행해 제품의 신뢰를 높이고 있음.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은단은 대표 제품인 자체 품질 인증제도로 원료 품질을 관리하는 영국 DSM사의 비타민 원료를 사용한 비타민C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영국 DSM사는 1934년에 세계 최초로 비타민C 원료를 생산했음. 이곳에서 생산한 비타민은 '퀄리씨(Quali-C)'라는 자체 품질 인증제도를 통해 원료 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DSM사의 퀄리씨 인증 마크 표시 제품은 원료, 생산, 품질관리 및 운송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유사나헬스사 이언스코리아의 코엔자임Q10 함유 건강기능식품 '코큐논 30'은 미국의 소비자 연구기관 '컨슈머랩'의 인증을 받은 제품임. 미국의 세계적인 소비자 연구기관인 컨슈머랩은 소비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시판되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를 무작위로 구매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제품을 테스트함. 특히 소비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엄격한 테스트 후 그 결과를 적극 공개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도가 높음. 롯데푸트 파스퇴르 '맘스 생(生) 유산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인증을 획득해 제품 신뢰도를 높였음. GMP는 고품질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원료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지켜야 할 제조 관리 기준을 말함. 인증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취득하기가 쉽지 않음.

2) 건강기능식품 시장 '쑥쑥'…대세는 유산균

(2017-3-10, 헤럴드 경제)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사건'여파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우려와 불신감이 커졌음. 하지만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시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규모가 점점 커지며 승승장구하고 있음. 또 업체들마다 신제품 출시, 해외시장 공략 강화 등 시장 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지난 20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생산실적 기준)는 약 2조3291억원으로 2011년 1조6855억원, 2012년 1조6855억원에서 2014년에 2조원대를 돌파하는 등 최근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 주요 특징은 면역기능 개선 제품과 비타민, 무기질 제품 생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개별인정형 제품들이 보다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등임.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성장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관심 품목으로 인기 상승 중임. 기존 유산균 시장에 절대적이었던 정장작용에 초점이 맞춰진 유산균에서 벗어나 보다 범위가 확대돼 피부미용, 여성건강 등 특정 기능성을 가진 유산균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음. 아울러 유산균을 제품에 넣은 과자, 초콜릿, 빵, 맥주까지 식품업계에 등장해 유산균의 B2B(기업 간 거래) 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가늠하고 이 같은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또 과거에 홍삼과 비타민이 대세를 이루던 것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밀크씨슬 추출물 등 상위 원료 품목도 순위가 바뀌며 다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재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 건강은 물론 다른 추가적 기능성을 발휘하는 유산균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 출시될 것으로 보임.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2012년 500억원대에서 2016년 1700억원대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하면서 꾸준한 인기 소재인 비타민 · 무기질을 바짝 추격 중임. 이와 함께 '맛있고 재미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신개념 제품이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지만 맛이나 재미요소까지 챙기려는 소비자 니즈가

강해지면서 업체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신제품 출시나 제품 리뉴얼, 자매품 출시 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눈, 전립선, 간, 관절 등 특정 부위 기능성을 강화하는 기능성 건강식품이 최근 4개년 평균 30% 성장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이같은 트렌드에 맞춰 각 기업들도 이에 특화된 건강기능식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CJ제일제당은 눈 피로 관련 기능성을 추가한 프리미엄 눈 건강기능식품인 'H.O.P.E 아이시안 듀얼액션'을 최근 출시하고 연령대별 타깃에 세분화된 추가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며 500억원 규모의 눈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공략할 계획임. 업계 관계자는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며 "1인 가구와 100세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만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고 말했음.

3)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시장 '쑥쑥' (2017-2-16, 뉴스토마토)

어린이 대상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음. 자녀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녀의 건강과 영양을 챙기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이로우면서도 부작용이 없어 날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과거 건강기능식품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음. 하지만 최근들어 20~30대를 중심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음. 면역력 강화와 영양을 위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부모들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1조1300여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증가했음. 최근 10년간 성장률은 10%에 달함. 어린이 대상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측정된 바 없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음.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면역력 강화와 고른 영양 섭취에 중점을 둔 제품들이 많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면역력 증진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7.3%로 나타나기도 했음.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건강기능식품이 사랑 받는 이유임.

4) '천연' '모유에서 찾은' 등 허위 표시 건강기능식품 적발 (2017-2-28, 이데일리)

건강기능식품의 첨가물을 허위 혹은 과대로 광고한 업체 5곳이 적발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 고의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결과 판매업체 2곳,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 내용을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도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음. 이번 점검은 '화학첨가물 無사용, 첨가물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됐음.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네이쳐퓨어코리아(전남 담양군), 주식회사 다움(경남 사천시)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했음.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분말, 합성비타민C가 15% 든 아세로라추출물이 들어 있었음. 씨티씨바이오는 유산균인 '프로스랩 베이비'는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음. 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분말을 넣었음에도 '無 화학첨가물'로 표시했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 ·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음.

5)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판매 확대될까 (2017-2-16, 쿠키뉴스)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정이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임. 15일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에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제외하

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거움.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를 제외한 모든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영업신고와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와 교육을 제외했으며, 2년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모니터링해 지속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음. 우선 관련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협)는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임. 건기협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활로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판매처에 대해 어떤 교육이나 신고도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음. 약사회는 '부적절한 특혜'라며 반발했음. 약사회 관계자는 "백수오 사태와 같이 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영업신고와 교육을 없앤다면 문제발생 시 회수나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로 적절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단지 13개의 상비약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아무런 교육과 신고없이 약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편의점에 부여하겠다는 것 자체로 논리비약이고 특혜다"라며 강하게 반대했음. 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폈음. 김지호 한의협 대변인은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교육과 건강기능식품 교육 자체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식약처는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도 관리를 강화할 생각은 없이 계속해서 산업측면의 규제를 푸는 방향에만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했음. 이어 그는 "한의계는 한약재를 베이스로 한 모든 약재에 있어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음. 반면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모양새임.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한돼있고, 지자체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단 효과 등을 살펴보고 지속여부를 고려해보자는 방향"이라고 밝혔음. 산업계도 환영 입장을 보였음. 건강기능식품업계 관계자는 "두통약 등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더 올라가고 결국 기업에서는 매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7. 유해물질&잔류농약

1) 관세청, 지난해 불법 유해식품 수입 적발 급증 (2017-1-25, 노컷뉴스)

지난해 불법 유해식품을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관세청은 지난해 가격신고 위반과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8만 9300여 건의 불법 수입물품을 적발했음. 이는 전년도 8만 2300여 건에 비해 8% 가량 증가한 것으로 품목별로 보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기능식품(22%), 의류(13%), 완구(11%), 식료품(5%) 등으로 조사됐음. 특히 불법 유해식품의 경우 9033건이 적발돼 전년도 2867건에 비해 315% 급증한 가운데 복용 시 환각증상이나 복통이 유발되는 다이어트식품과 성기능 개선제, 운동보조식품 등이 주를 이뤘음. 국가별 적발 비중은 중국(38%)이 가장 많았고 미국(24%)과 일본(5%)이 뒤를 이었고, 유형은 가격신고 위반(25%), 부정 감면(16%), 원산지표시 위반(9.4%) 등이었음. 관세청은 "불량 먹거리와 저가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앞으로도 수입물품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성실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2) 농관원, 농약잔류허용기준 대폭 강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2017-3-10, 여수인터넷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소장 김경중)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음. 1차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함. 2차로는 2018년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시행 될 예정으로 특히, 적용 농약이 많지 않은 여수 특산물인 돌산갓과 방풍나물의 재배에 특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예전에는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농가들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됨. 여수 농관원 관계자는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농약의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1년에 여러 번 수확하는 연작을 피하고 화학비료를 줄여 농약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음. 또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은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적용 작물, 사용 시기, 횟수,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산 농산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2018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비하여 줄 것"을 강조했음.

3)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함유 농약 '안전합니다' (2017-3-14, 농수축산신문)

농촌진흥청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추정 물질로 2015년 3월 발표했던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 농약에 대한 재평가 결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음. 글리포세이트 및 다이아지논에 대한 재평가는 WHO와 미국의 발암성 평가자료는 물론, 국내에서 농작업자 노출량 측정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으며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신규 · 변경 등록 및 출하물량 제한 조치를 지난달 2일부터 해제했음. 또한 말라티온은 해당 제조회사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5일 등록을 취소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지난달 28일까지 전량 회수 · 폐기하도록 조치했음. 안전성 재평가 결과, 글리포세이트는 비선택성 제초제로 농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잡초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의한 섭취 가능성이 적고, 동물시험에서 발암성이 유발되지 않았으며,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도 낮았음. 다이아지논은 동물시험에서 발암성이 유발되지 않았고 유전독성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도 낮았음. 한편 유럽 식품안전청, 일본 후생노동성, WHO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합동 농약잔류전문가 회의, 미국 환경보호청 등에서도 발암성 농약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음.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농약 등록 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안전성 재평가 결과로 해당 농약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 시 안전사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음.

4) 경기도내 유통농산물 1.3% 잔류농약 부적합 (2017-1-23, 헤럴드경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9436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20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23일 밝혔음.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성분 220개 항목을 검사했음. 검사결과 쑥갓 17건, 고춧잎 13건, 상추 13건, 열무 10건, 부추 9건, 시금치 8건 등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음.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클로르피리포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클로르다노닐, 프로사이미돈 등으로 모두 저독성 농약으로 나타났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702㎏은 전량 압류 · 폐기조치됐음. 농산물 생산자는 적발 시 부터 1개월간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됐음.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유통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은 1% 내외로 모두 저독성 농약이었고, 가정에서는 과일 이나 채소류를 수돗물에 1~5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잔류농약이 거의 제거된다"고 했음.

8. 기타

1) 유통기한 4배 늘린 갈비탕 육수 업체 등 79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2017-3-9, 경기G뉴스)

유통기한을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소분 · 제조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 ·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음. 이번 적발은 특사경이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56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로 적발업소는 전체의 13.9%에 해당함. 적발업소의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임. 의정부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확인됐음. 또, 시흥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 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음. 양평에 있는 C식품소분업체의 경우 '미역부각'을 구입해 소분하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7월 25일로 한 달 늘려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 용인 소재 D식품소분업체는 소분 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음.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업소 가운데 미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됨. 아울러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주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유통단계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해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도민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소탕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음. 한편,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해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중인 식품범죄 소탕작전의 연속으로 도 특사경 24개반 504명이 투입됐음.

정리: 한인화(광주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